

여성의 권력자원과 복지국가 형성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

홍 세 영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논의
 - 2.1 권력자원론
 - 2.2 여성의 권력자원과 복지국가
3. 스웨덴 사례분석
 - 3.1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
 - 3.2 이중 모델
 - 3.3 여성 친화모델
4. 결론

1. 서론

권력자원론에 따르면, 민주정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피지배계급인 노동자들이 지배계급인 소수의 자본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집단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협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즉 참정권을 소지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좌파 정당 등 거대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목표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의

회민주주의라는 공식적인제도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자 계급에게 유리한 복지 정책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 논지이다(Linski, 1996; Hweitt, 1997; Korpi, 1983; Esping Anerseon, 1992). 실제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권력자원의 구성요소인 노동자들의 응집력 즉 좌파정당의 의석수, 노동조합 수 등은 복지 지출 및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Kellermann, 2005; Bradley et al, 2003; Hicks and Swank, 1984; Kangas, 1991; Palme, 1990; Korpi, 1989; Stephens, 1979; Cameron, 1978). 국가간 비교연구에서도 노동자 계급의 동원이 초기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형성하는데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Hicks, 1999), 국가 내 지역간 복지 수준에서도 좌파정당의 역할이 복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ellermann, 2005). 이러한 논지는 페미니스트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Korpi, 1983; Esping Anerseon, 1992).

특히 스웨덴 페미니스트들은 양성 평등을 위한 주요 전략이 바로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를 통한 복지정책의 수정이었다. 이들은 복지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행위와 사고를 바꿀 수 있다고 보았으며, 궁극적으로 여성이 남성을 향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정책은 정치의 산물로 스웨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권력자원의 동원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복지정책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스웨덴의 아동보육정책(child care)인 공공 보육시설서비스와 부모휴가제도는 이런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 두 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서 노동자인 동시에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남 녀 사이의 권력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보육정책이 스웨덴의 양성평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Duvander and Andersson, 2008; Haas, 2003; Michel and Mahon, 2003; Rubery, 2002).

물론 스웨덴 아동보육 정책이 단지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당시 스웨덴 사회의 인구문제,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사회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설명하는데 오늘날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즉 그 사회에 문화적 유산이 각 국가의 특수한 사회정책을 형성한다는 논의가 있다(Esping Anderson, 1992).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사회에서 아동 보육정책을 형성하는데 양성평등에 입각했고(미야마토타로, 2003), 이들의 핵심세력은

여성의 정치적 동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점은 유사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경험하고 있었던 다른 주변국가 정책의 차이점을 만들 수 있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젠더 평등이 낮다. 세계경제 포럼(WEF)에서 발표한 성평등지수(Gender Gap Index: GGI)에서 135개국 중 107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복지의 책임도 정부보다는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겨지기 때문에 여성이 복지의 주요 생산자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런 점을 한국 여성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낮다는데 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스웨덴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권력자원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어떻게 복지제도를 형성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지 스웨덴의 보육정책의 역사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권력자원론

권력자원론은 복지국가의 기원, 역할, 발전 등을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한 이론으로 Korpi, Esping Andersen, Stephan 등 스칸디나비아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권력자원론은 탈전쟁 이후 복지국가들의 상이성을 설명하는데 신뢰성을 확보했으며, 오늘날 많은 비판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Myles and Quadagno, 2002; Korpi, 1998; Olson&O'conner, 1998).

권력자원론에 따르면 권력이란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권력은 두개의 이상의 행위자의 대립구조를 나타내며, 갈등이라는 가시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영향력은 항상 유지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권력자원은 행위자들에게 보상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특성들로 정의내릴 수 있으며 권력자원의 소지에 따라 권력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 이러한 권력자원론은 계급(class)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분배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권력자원론자들의 해석에 따

르면, 권력자원의 분배와 재분배에 따라 개인, 조직, 국가, 집단 마다 평등의 차원이 다르며 특히 시민사회에서 권력자원의 분배는 시장에 직접적인 분배적 결과에 정부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들은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경제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었던 것도 자본과 생산수단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권력자원을 소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본가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Bardly et al., 2003; Korpi, 1983; Stephens, 1979).

노동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수정하기 위해서 다른 자원이 요구된다. 바로 투표권을 가진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원이었다. 민주주의는 수의 정치로 상대적으로 자본가 보다 많은 노동자의 수는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유리했다. 분산되어 있던 노동자들은 정당과 노동조합을 통해 정치적 동원화가 이루어졌으며, 복지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좌파정당, 노동조합은 이들에게 중요한 집단이다. 노동자들의 후원을 받는 좌파정당들과 노동조합은 정책을 형성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재분배 과정을 수정한다. 권력자원론에 따르면 복지정책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권력관계를 변화시켜주며, 노동자들의 권력자원을 강화시켜주는 동시에 유지시켜주는 제도화된 권력 자원이었다(Bardly et al., 2003; Korpi, 1983; Stephens, 1979).

사실 노동자의 권력자원의 정도는 분배정책에 영향을 주는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복지정책의 성격에 따라 구성원들의 자원의 분배는 상이하다. 이런 점은 권력자원이 복지정책을 통해 평등의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Bardly et al., 2003; Gray et al., 2003; Kellermann, 2005; Korpi, 1983; MacPhail, 2000; Stephens, 1979) 권력자원의 소지에 따라서 복지정책이 상이함을 밝혔으며, 또한 분배정도 또한 다름을 입증하였다.

2.2 여성의 권력자원과 복지국가

페미니스트들은 권력자원론이 복지국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건장한 성인남성이외에 다른 계층을 포함하지 못한 점, 성을 간과했다는 점과 그리고 가족 내의 성적 분업을 통한 권력관계를 무시했다는 데 비판하였다. 우

선 권력자원이론이 자본가와 노동가 계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졌기 때문에 노사 관계 이외에 젠더 차별, 연령차별주의, 인종 차별주의 등 다른 계층간의 불평등을 간과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여기서 의미하는 시민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는 계층으로 이들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이다. 결국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무급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학생, 노인, 장애인,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한 국가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불법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집단은 제외되었다(Hobson&Lindholm,1997).

또한 권력자원의 접근은 몰성적(Gender-blind)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권력자원이론은 정치적 힘의 동원으로 복지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 정치적 힘이란 남성의 집합적인 힘을 의미하지 상대적으로 정치적 단결성이 약한 여성의 집합성을 대표하지 않았다. 결국 이런 점은 재분배 정책을 통해 계급간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남성노동자들에게 제시해주었지만 젠더 불평등 속에 있는 여성들에게 해결책을 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권력자원 분석은 국가, 시장, 가족의 삼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족과 복지국가와의 관계를 무시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이중 억압을 지적한다. 여성은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서 자본가와 남성에 의해서 억압받을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인 가족 내에서도 남성에 의해서 종속되어 있다. 이런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양산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라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Pateman는 가부장적 복지국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O'Connor와 Olroff도 복지국가 구조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연속을 유지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복지국가는 자율적인 여성가구가 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Olsen & O'Connor,1998; Pateman, 1998).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도 노동자계급처럼 권력자원의 동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들의 노동운동과 달리 기존의 여성운동이 하나로 응집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운동의 제도화전략을 요구하면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국회의원수, 노조 가입률, 좌파정권, 중앙 및 지방정부 관리직과 같은 권력자원을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 페미니스트라고도 불리는 이 전략은 정당, 국회, 정부 등 공식적인 영역에 통합되어 젠더 평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비정치적이며 비공식적 비정부적인 아

래로부터의 여성운동 하나로 집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 의사결정과정
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Annesey, 2007;
Hobson and Lindholm, 1997; Mahon, 1997; Skocpol, 1992).
Annesey(2007)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당시 영국의 여성운동은 강력했음
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
행된 복지 개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비판한다.
Annesey(2007)는 여성운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역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하나로 합쳐져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화된 여성운동의 필요성은 언급하였
다. Naumann(2005)도 독일과 스웨덴의 여성의 권력자원 동원의 차이가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젠더 평등을 위
해서 국가 페미니스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Bud and
Mumford(2008)은 노조 가입률에 따라 부모휴가와 특수한 유급휴가가 상
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노조 응집률이 높을수록 기업은 노동자
들이 직장과 가족 일을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raser(2003)도 양성평등 국가 구현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재분배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페미니스트들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성격은 바로 이중 모델이다. 이중
모델은 여성과 남성이 경제적 부양자인 동시에 돌봄 제공자역할을 똑같이
공유하는 것이다(Fraser, 2003; Sainsbury, 1996 ; Lewis, 1992 ; Hernes,
1989 ; Bud and Mumford, 2008). 사실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어서 젠더
평등의 의미는 “같음”과 “차이”라는 논란에서부터 시작한다. 전자는 여성
과 남성이 임금노동자와 부모 역할을 모두 똑같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
다면 후자는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성의 모
성을 사회적인 가치로 인정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자는 사회주
의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으며 후자는 모권주의에 바탕을 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요구되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젠더 평등은 남성과 여성 둘 다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는 “같음”이라는 것
이 동의하고 있다(Fraser, 2003; Sainsbury, 1996 ; Lewis, 1992; Hernes,
1989; Bud and Mumford, 2008).

페미니스트들은 양성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chil
d care 정책을 채택한다. child care는 모든 여성들이 공유하는 문제로 여성
들을 하나로 통합시켜줄 수 있는 이슈였으며, child care 정책에 따라 여

성과 남성의 권력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권력 자원은 child care 정책을 수정하기위해서 동원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양성평등의 대표적인 국가 스웨덴 사례를 통해 여성의 정치적 권력동원이 스웨덴 child care 정책을 발전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스웨덴 사례분석

3.1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초기 스웨덴 여성운동은 조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력도 약했다. 1930년 전 스웨덴 여성운동은 이념적으로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며, 하나로 통합시켜줄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앵글로색슨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처럼 여성 풀뿌리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스웨덴의 정당들도 여성들을 잠재적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나 정치적 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특히 중산계급 여성조직과 노동계급 여성조직 사이에 이념적인 분열이 강했다¹⁾. 이런 점은 여성의 정치적 세력들이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930년대 사민당 정부의 정치적 심벌인 “인민의 집”은 페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Hobson, 2003). 당시 스웨덴 1910년대 보다 2배 이상이 조직이 생겼으며, 여성조직들은 계급과 정당을 아우르는 협력으로 과거 여성들 사이의 계급적대감도 사라졌다. 이런 점에서 1930년대를 스웨덴 여성운동의 전환기(turning point)라고도 한다(Hobson, 2003; Naumann, 2005).

1930년대 가족정책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상이한 젠더적 담론이 형성되었다. 당시 엘렌키(Ellen Key)의 “모성주의(maternalism)”와 알바 뮈르달(Alva Myrdal)의 “여성의 해방주의”의 논쟁으로 뜨거웠다. 우선 엘렌 키(Ellen Key)는 여성의 권력은 여성으로서의 역할과 여성의 자기

1) 특히 부르주아 여성 조직인 스웨덴 가정주부 국가 협회(Swedish National Association of Housewives)조직과 사민당의 여성조직(Social democratic Women's Union) 사이에 정치적 성향, 계급간 차이 등으로 분열이 있었다.

인식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으며, 여성의 임금 노동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면서 여성의 모성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알바 뤼르달(Alva Myrdal)은 여성의 해방은 임금 노동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은 가사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하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 주거 공동 부업이라는 급진적인 사상을 제시하였다(Hobson, 2005). 이러한 상이한 대립 속에 가족정책의 모델은 알바 뤼르달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알바 뤼르달의 주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다수의 여성조직들이었고 또 복지국가 기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사회공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스웨덴 여성조직은 사회주의 여성운동의 성격이 강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자들로 여성의 재생산 문제를 생산의 영역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가사노동과 자녀 육아는 사회화될 것을 주장하였다. 더욱이 복지국가의 주요 설계자인 사회공학자들도 여성조직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보다 실용적인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인들이었다. 사회공학자들은 사회는 기름칠을 잘 바른 기계와 같이 합리적 실증주의, 과학, 기술의 원리에 의해서 잘 관리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소위 이러한 사회를 현대사회로 정의하였다(Hirdman, 1998). 그들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가족정책이 스웨덴 사회의 인구문제나 빈곤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이들은 여성을 임금노동자이자 어머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시민당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요구하였다. 여성조직들은 학령전기 모든 아동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유급 모성휴가 확대, 그리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보육정책에 대한 요구는 여성의 계급 간의 동맹을 더욱 견고화시켰으며, 여성들 사이에서 계급간의 연대감을 구축하면서 정치적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Sundstrom 1991). 이들의 노력으로 직장여성들은 결혼 후에 일할 수 있는 권리와 한 달이라는 모성휴가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Sundstrom 1991).

모성휴가는 오늘날 부모휴가의 모태로 1930년대 출산수당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간이 되는 모성휴가제도가 만들어진 1931년도 당시 고용된 여성이 출산할 경우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당시 휴가는 1달이었으며 급여는 매우 적었으나 193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36년 재집권에 성공한 시민당은 1937년 국회에서 출산과 육

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1937년 출산수당이 도입되었다. 당시 인구문제위원회가 소득조사없이 급부할 것을 주장했던 출산수당을 필러는 연수 3천크로나라는 느슨한 소득제한을 설정하고 급부액은 1백 10크로나~1백 25크로나를 설정하여 도입하였다. 이 출산수당은 스웨덴의 보편적이 복지정책의 첫걸음이었다. 1939년 종업원 3인 이상의 기업에서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감봉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12주간 육아휴직이 인정되었다(미야모토타로, 2001).

아동수당은 1937년 고아나 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산조사 형식으로 우선 도입되었지만 1940년대 사민당 정부는 보편주의 성격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당시 가족임금을 추진하고 있었던 보수당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가족임금은 스웨덴의 1920년대 일부 산업부분에 존재했던 제도였으며 보수파는 이를 부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출산수당제도서 실현된 모친을 대상으로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혔다. 사민당도 가족임금은 중소기업 종업원이나 미취업자 등의 대상에서 누락될 수 있으며 보편주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Hatie, 1974; 미야모토 타로, 2001 재인용). 궁극적으로 1947년 의회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아동 1명당 2백 60 크로나를 지불하는 아동수당 제도 도입이 결정되었다(미야모토 타로, 2001 재인용).

1950년대는 스웨덴의 경기 호황과 함께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더욱더 가족정책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다. 스웨덴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해지지 않았으며, 국민들도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은 인프라 구조가 보존되었으며 경제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노동조합과 협력관계에 있는 고용주들은 많은 여성들을 산업영역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였다. 결국 남성 생계부양자 체제의 강한 이념이 지배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여성 고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고용과 사적인 가족의 돌봄과 가사 노동사이의 간격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배경은 1955년 직장여성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3달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모성휴가 제도가 도입되었다(Sundstrom, 2002).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스웨덴 가족정책은 젠더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남성생계부양자체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1932년 이후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사민당 정책의 주요초점은

노동자와 자본가계급에 토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다른 계층인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사민당의 주요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었다. 게다가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적 가치는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전통적인 성별 역할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스웨덴 복지사회의 원동력이 되었던 노동운동도 전통적 성별 이데올로기가 강력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은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들의 복지국가 설계는 “남성생계부양자 체제와 여성 가정주부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내의 분위기가 강력했다는 점이다. 당시 노조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노조는 여성들에 대해서 주요 관심을 갖지 않았다(Hirdman,1998).

3.2 이중 모델

1960년대와 1970년대 여성의 권력자원은 더욱 증가하는 사회적 배경이 형성되었다. 우선 1932년 사민당이 집권하게 된 기반을 마련해준 적녹(red-green alliance)동맹이 1957년 해체되었다. 이런 점은 당시 주요 세력인 사민당과 자유당은 화이트칼라 조직과 여성 유권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스웨덴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했으며, 여기에 대안으로 노조(LO)는 기혼 여성을 사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또한 1950년대 말부터 스웨덴 페미니스트들은 “인민의 집”이 젠더 평등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들은 1960년대부터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은 좀 더 조직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변해가게 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조직 간에 협력을 강화했으며, 양성평등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당시 스웨덴 사회의 이념의 전환을 위해 국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유당, 사민당, 보수당 과 같은 정당 노선을 아우르는 중요한 연결망이 형성되었고 위로부터의 페미니스트 운동과 아래로부터의 페미니스트 운동이 결속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Group 22로 이는 노동조합, 정당, 공영 매체에 있는 영향력 있는 남녀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부모와 임금근로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스웨덴에 몇 개 안되는 풀뿌리 여성조직들은 거리행진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켰다. 1960

년대부터 페미니스트들은 각종 매체와 글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이중 모델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 자유당 젊은 여성당원이었던 Eva Moberg는 여성과 남성이 국가정책을 통해서 둘 다 부모와 임금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스웨덴 사회에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으며, 1962년 노르딕 사회 과학자 단체는 여성이 삶과 일이라는 발행지를 통해 당시의 담론을 여성의 한정적인 역할에서 남녀 성역할로 옮겼다(Hobson, 2003, Mahon, 1997).

이러한 양성평등의 구현으로 아동보육정책의 개혁은 중요한 문제였다. 당시 아동 보육정책에 대한 관점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선택”과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사이에 이념적 대립이 있었다. 자유당과 보수당은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아동 돌봄 수당(care allowance)을 제안하였다. Moberg는 사회보장제를 재원으로 한 child bonus system을 도입하면 여성과 남성이 부모역할과 근로자 역할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주장은 사민당과 자유당의 전통주의자에게 호소력이 있었으며 자유당과 중당당의 연합 정당이 가족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즉 타협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그렇지만 사민당 여성당원들과 보수당은 1960년대 케어 수당 도입을 반대했다. 사민당 여성당원들은 “선택”은 부르주아 여성 계급의 특권으로 해석했으며, 돌봄 수당은 노동계급여성에게 허용될 수 없는 사치품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자유당과 사민당 급진적 여성당원들도 선택은 가정주부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재해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보수당도 국가의 과도한 부담감을 우려하면서 돌봄 수당을 반대했다. 이 이슈는 정당과 젠더 전 영역에 걸쳐 담론을 형성되었고 또한 스웨덴의 풀뿌리 조직인 정치권 밖에 있는 여성조직들을 자극해 거리 운동을 하게 되었다(Hobson, 2003, Mahon, 1997).

결론적으로 1960년대 중반 가족정책의 논의는 사민당과 노조의 강력한 후원 하에 “케어수당과 선택”에서 “일하는 엄마”에 대한 논의로 옮겨가게 되었다. 1960년대 스웨덴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로인해 노동력 부족사태를 경험하고 있었다. 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이주 노동자와 스웨덴 기혼여성 두 집단 간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노조(LO)내의 페미니스트들은 유급노동을 통해 여성의 독립을 요구했으며, Group 222의 강력한 지원 하에 논의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사실 LO의 여성들은 1950년대부터 공공 아동 보육 정책을 위해

서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해왔었지만 당시 노조의 목표는 남성생계부양자 체제에 맞추어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접어들면서 노동조합 내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1945년과 1967년 사이 여성은 17%에서 34%로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기혼여성들이 유급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아동보육정책을 강력히 옹호하게 되었다. 자유당 역시 공적지원에 의한 day care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사민당과 다르게 가족 재가 케어와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탁아시설을 더 선호했다. 자유당과 중앙당은 재가케어가 비용이 저렴하고 부모선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LO, TCO, 사민당은 공공시설이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았다. 공공시설은 계급 간에 그리고 남녀 간에 모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교육적 이점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Hobson, 2003; Mahon, 1997; Naumann, 2005).

“선택”의 개념은 공적으로 지원되는 day care 방법에 길을 열어놓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페미니스트들이 탈상품화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점이다. 바로 부모 휴가임. 부모휴가개념은 1969년 LO의 가족정책 문건과 LO-SAP 평등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구성되었음. 페미니스트들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성휴가가 남성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TCO는 1971년 가족정책문건에 부모휴가 소득비례 부모휴가제도를 포함시켰다. 이것은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는 중앙당과 자유당 연합의 돌봄 수당보다 부모휴가를 선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74년 부모휴가제도는 법으로 제정되었다. 다른 임금근로자 모델처럼 부모휴가제도는 소득대체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징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의 승리였다. 그러나 부모휴가는 이후 확대되었지만 다수 여성이 사용자라는 점은 젠더 평등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Mahon, 1997).

1960년대 여성의 정치적 활동은 1970년대 더욱 강력해지는 계기를 마련 해주었다. 1960년대까지 사용된 스웨덴 사회의 평등(jämlikhet)이란 용어는 차별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카테고리로서 여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젠더에 대한 공적 담론은 젠더 평등(jämställdhet)을 사용하면서 다른 불평등과 구별하여 젠더 평등을 인

식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의미는 젠더 평등으로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화가 다르더라도 평등한 위치(equal position)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단어는 사민당내에서 받아들였다. 사민당은 1968년 정치적 슬로건 “더욱 평등해지자(More equality)”을 내세우면서 jämställdhet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새로운 사민당 지도자 Olof Palme는 그의 정치적 의도 속에 여성의 이익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었다. 1972년 그는 의회 연설에 jämställdhet의 의미를 여성이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이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여성운동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한 부분으로 주장하였다. Olof Palme은 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고용과 가사 노동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은 정치권과 노조 내에서 활동을 증가해야 할 것을 고무시켰다. 이런 점은 1970년대부터 사민당이 전통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중 소득 가족 모델로 전환하게 한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다음으로 1960년대 여성들의 공공보육 시설 확대와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은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이는 여성의 평등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Hobson, 2003; Naumann, 2005).

이러한 비판과 함께 1970년대 여성의 권력자원은 더욱 견고해져 가고 있었다. 1970년대 많은 수의 직장여성들이 증가하는 자동적으로 노조가입에 여성들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70년을 기준으로 당시 블루칼라 가입 노동자들 중 29%, 화이트칼라 노동조합(TCO)는 43%였다. 이런 현상은 각 노동조합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여성의 문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많은 직장여성들은 정치인들에게 여성의 문제의 문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였다. 더욱이 스웨덴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전국들에 비해 재정이 탄탄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아동 양육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평등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성의 정치권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Pavlova, 2004).

더욱이 1970년대 페미니스트 운동은 더욱 급진적인 성격으로 변해하고 있었다. 신좌파 이념에 영향을 받아 자율적인 여성조직들이 다양한 정치적 집단 들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여성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다른 서구 급진주의성향을 가진 페미니스트들과 달리 가족제도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여성해방 전략으로 고용을 수단으로 보았고 가족과 고용의 결합을 강조하였다. 이들의 성향은 제도권 내에 있는

페모크라틱과 다르지 않았다. 1960년대 페모크라틱에 의해 달성된 보육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1972년 95,000명의 학령전기 아동들이 시설을 이용하였지만, 400,000명은 이용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매체를 통해 이슈화되었고 많은 젊은 여성들은 스웨덴 인민의 집을 비판하면서 거리에서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 또한 1960년대 신 페미니스트 조직 Group8은 “울음을 그치고, 화내고 공격하라(don't cry, get angry and attack)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운동을 함께 했다. 이러한 스웨덴의 제2의 여성운동의 물결은 아동보육정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기존의 제도권 내에 있는 전통적인 여성조직들을 급진화시켰고, 이들은 중앙조직에 압력을 가하면서 평등을 보장했던 정부 정책에 도전하였다. 결과 1973년 3세 이상에서 6세미만의 모든 아동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획득하였다. 1970년에서 1980년 사이 80,000명에서 406,000명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Nauman, 2005; Pavlova, 2004). 이런 보육정책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견고해졌다. 공적 보육정책은 1976년 보수당 정권시기와 오일쇼크에도 확장되었다. 1990년대 까지 페미니스트들은 아동보육정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정치적 압력을 가하였다(Nauman, 2005).

1970년대 여성의 자율적인 동원화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다소 소규모였고 성격도 급진적인 성격보다 온건하고 실용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들은 양성평등을 위한 아동 양육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다른 정치적 세력과도 동맹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협상했다. 만약 이들과 뜻을 달리하는 정치적 세력들이 공적 아동보육 정책을 반대할 경우 여성들을 동원해 거리행진을 통해 항의하였다. 이런 활동은 페모크라틱 활동이 공식적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다소 급진적이고 비타협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제도 밖이나 안에 존재하는 스웨덴 여성 단체들은 “일하는 엄마”와 젠더 평등에 대한 동질적인 페미니스트 비전을 공유하고 있었다(Naumann, 2005).

복지정책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을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투쟁의 결과 1970년대 말 스웨덴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는 이중 생계부양자 체제였으며, 1990년대 말 4% 여성만이 가정주부였으며, 많은 스웨덴 국민들은 전형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았다(Hobson, 2003).

1960년대와 1970년대 스웨덴 여성 운동 전략은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

적인 성격을 띠었다. 특히 국가 페미니스트들과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는 여성조직과의 단결은 보육정책을 확대하는데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공공 아동보육시설을 보편주이에 입각하여 확장할 수 있었으며 부모휴가 제도의 도입할 수 있었다. 당시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과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항이 거의 없었으며, “인민의 집”이라는 정치적 이념이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더욱이 노동시장에서는 스웨덴의 경제 호황으로 여성의 인력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여성들의 투표를 얻으려는 사민당과 자유당과의 경쟁, 좌파정당의 강력한 정치적 분위기, 계급간 평등에 대한 쇄신, 사민당 엘리트들의 공적 서비스 영역확대를 해 여성의 새로운 고용의 기회와 사적 아동양육문제에 대한 공적 해결책 선호 등이 여성운동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점은 스웨덴에서 “피없는 혁명”이라고 평가받기도 했다(Naumann, 2005).

3.3 여성 친화적 모델

1980년대 이후 젠더적 관점에서 스웨덴 복지체제는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women-friendly)로 평가 받고 있다. Hernes(1989)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는 여성이 자신의 자녀, 직업, 공공 생활에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남성보다 선택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제반 기반을 마련해주는 국가를 의미한다. 특히 국가는 공공 아동보육시설의 확장으로 공사 경계를 무너뜨리고 재분배 정책을 통해 남녀 간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스웨덴은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의 근간에는 국가 페미니즘이라는 제도화된 여성의 권력자원이 뒷받침이 되고 있었다. 1980년대부터 여성의 권력자원은 아동보육 정책을 통해 점점 더 확고 해주고 있었다.

이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젠더평등(jämställdhet)을 재해석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jämställdhet는 보편적 시민권의 틀 내에서 민주주의와 권력이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재 정의했으며, 1990년대 남성과 여성사의의 경제적 권력적 분산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jämställdhet은 여성 유권자들이 스스로 정치체제를 수정하여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페미니스트들의 권력과 행위를 반영시켰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권력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이들이 의미하는 권력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과 여성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1990년대 여성의 정치적 조직들이 범람하게 되었다. 여성유권자들은 Support Stcking이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정치체제 속에 여성을 지원하고 정당, 정책, 의사결정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더욱 강화시켰다(Hobson, 2005).

1980년대와 1990년대 스웨덴 복지정책은 다양한 위기를 경험하는 시기였다. 우선 거시 경제적 특징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 규제에 대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으며, 1990년대 스웨덴은 1930년대 이후 최고의 경제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실업률은 치솟고 있었으며, 공적 재정의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었다. 또한 정치적으로 사민당의 실권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보수연합 정권의 집권은 스웨덴 복지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시작된 탈중앙화는 권력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또한 1990년대 스웨덴의 유럽연합의 가입은 스웨덴 복지정책이 다양한 영향을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었다. 자연히 child care 정책도 피할 수 없었다(Naumann, 2005; Nyberg,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child care정책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우선 공공 아동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도시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있었다. 1985년을 기준으로 생후 18달 이상의 모든 아동에게 공공 아동보육시설을 확대했으며, 공적 자금은 아동보육시설을 위해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또한 1995년 child care Act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대기시간 없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1974년 모성휴가를 개정한 부모휴가제도도 아동당 180일 휴가에서 1978년 9달까지 휴가일수를 확대했으며, 지속적으로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휴가제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적으로 뜨거웠다. 당시 부모휴가 제도는 대부분이 여성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남성은 단지 3%만이 사용하고 있었다(Earles, 2008).

사실 이런 발전 이면에 정치적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동보육정책과 관련된 가장 큰 위기는 1976년에서 1982년 까지 보수 연합 정권이

집권했던 시기였다. 당시 사민당은 페미니스트들의 권력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1930년대부터 1970년대 까지 양성평등을 구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민당의 실권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커다란 타격이었다(Mahon, 19998). 1980년대 비사회주의 정당의 집권은 선택, 탈중앙화, 민영화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요구하였으며, 아동보육정책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들은 child care의 민영화에 대한 제안을 했으며, 1950년대 1960년대 페미니스트 사이의 논란이 있었던 “선택”의 문제를 다시 끌어왔다. 이들 정부는 부모가 임금 노동자가 될 것과 아동 양육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면서 다시 아동 돌봄 수당 도입을 요구하였다(Bergqvist and Nyberg, 2001).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 여성의 독자적인 권력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보다 훨씬 강했으며, 특히 사민당 여성당원들은 이러한 비사회주의 정당의 요구를 패배시킬 제도화된 권력자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할당제로 많은 여성들은 국회의원, 장관, 조직의 상층부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사민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었다. 사민당 여성당원들은 아동 돌봄 수당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과 스웨덴이 추구했던 젠더 평등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였다. 게다가 아동돌봄 수당은 당시 스웨덴의 복지정책 축소될 위기에 있었던 상태였으며 실업률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밀려날 가능성 있다는데 더욱 우려하였다(Hobson, 2005). 사민당의 재집권 후 페미니스트들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들은 더욱 확고하게 이중 모델을 구성해나갔다.

물론 1980년대 신자유주의 성향의 영향과 우파-중앙정권(center-right)에 의해 보육시설의 민영화와 비영리시설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영리 및 비영리 시설은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주변도시에서만 일부 이용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다른 지역은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사민당의 재집권은 공공보육시설 중심의 정책으로 다시 복구하였다(Earles, 2008). 또한 당시 지방분권으로 공공 아동보육시설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45% 분담을 하고 있었으며, 부모는 이용료 10%를 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아동보육 종사자의 저임금에 대한 문제는 부모들이 이용료를 높여서 극복하려 하였다.

1998년까지 부모 부담을 17%까지 올렸으며, 이는 오히려 저소득 가구의 탈근로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1998년 LO와 사민당은 child care fee에 대한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선거 공약을 내세웠으며, 2002년 선거에 부모 이용료는 11%로 내렸다. 모든 가구는 아동수에 따라 아동보육이용료를 가족소득의 1~3%이하가 되게 하였다(Earles, 2008).

2000년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정치적 활동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2002년 이후 45.3%이상의 여성들이 국회의원 의석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정당, 지방자치 정부, 지방 의회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양성평등을 위한 child care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중 부모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모는 아동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Pavlova, 2004). child care의 확대는 공공 섹터에서 여성의 세력화가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동보육시설 종사자들은 기초자치단체 노동조합 회원(Kommunal)의 주요 세력으로 전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이 80%이다.

2000년 이후 공공 아동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90%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학령전 아동들에게 젠더 평등 교육을 시키는 등 질적인 향상도 가져오고 있다. 부모휴가제도는 1995년 아버지 달이 도입되면서 휴가의 30일은 다른 부모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2002년 3달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 성평등보너스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부모휴가를 사용할 경우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스웨덴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 젠더적 관점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06년 우파정권의 집권은 아동돌봄 수당과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스웨덴 모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스웨덴 복지모델이 양성평등을 구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성적 분리 현상이 강하고, 아직도 상대적으로 여성이 부모휴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은 이들이 극복해야할 문제이다.

4. 결론

유엔 인권위원회(UNDP)와 국제의회연맹(IPU)의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 여성 의원비율과 여성 장관직 비율은 각각 45.3%, 52.4%로, 스웨덴 남성과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OECD(2008)에 따르면 2007년 좌파성향의 정당의 의석 점유율은 46.2%로 30개 국가들 중 5위, 노동조합율은 70%로 2위를 기록하였다(홍세영, 2010). 이처럼 정치적 세력화가 높은 이유는 스웨덴 여성운동 초기부터 정당이나 정치를 통해서 “제도화”되었기 때문이다(이현근, 2007; 미야모토타로, 2001; 이건정, 1992; Kim, 2001).

스웨덴 대부분의 여성운동은 정당이나 노조 및 기타 정치조직들의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설령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정당과 정치조직들에게 강한 압력과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노동운동조직과 정당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여기의 주요 세력이 여성사민주의자와 여성 국회의원이다(이건정, 1992). 이러한 제도화된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는 국가 주도하에 젠더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 여성운동가들을 국가 페미니즘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분석결과 스웨덴에서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정도와 child care 정책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분석은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 정도에 따라 1930년대~1950년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1960년대~1980년대 이중 모델, 1980년대 이후 여성 친화적 모델로 나누었다. 남성생계 부양자 모델 시기 스웨덴 여성운동이 하나로 집결되었고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보육정책을 위해 활동하였다. 당시 여성운동은 모권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었으며,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아동수당과 유급 모성휴가를 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세력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민당과 노조에서 추구했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입각한 복지 제도를 구축하게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시기 스웨덴 여성운동의 윤곽을 만들었던 시기로 그 이후 보육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권력자원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다. 이들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당원으로 활동하여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중요한 점은 페미니스트들이 정당을 초월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보육정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이념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임금 노동자와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중 모델 이념으로 국민들의 시각을 변화시키려고 하였으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 항의하는 등 이전보다 급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공공 아동보육시설의 확대와 부모휴가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런 제도는 역으로 여성의 권력자원을 강화시켜주고 유지시켜줄 수 있는 제도화된 권력자원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스웨덴 복지체제는 여성 친화적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예전보다 복지정책이 양성평등에 더 근접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성격의 이면에는 여성의 확고해진 권력자원을 소지했기 때문이다. 많은 여성들은 할당제로 정당, 국회, 정부로 진출했으며, 여성조직들도 증가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정당과 노조가 여성의 요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child care의 확대로 아동보육 시설 종사자의 확대는 공공부분에서 여성이 세력화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공공 아동보육시설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부모휴가 또한 아버지달과 성평등 보너스제도를 도입하여 남성의 사용일수를 늘리는 등 양성평등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복지국가를 위해서 여성의 권력자원인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최근 한국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는 국회의석 점유율로만 보았을 경우 135개국 중 85위로 전체 여성의 점유율 1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낮은 이유는 좌파정당의 부재, 여성의 낮은 노동조합율, 미미한 정부 여성관료 수 등 여성의 권력자원이 낮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조직들도 역사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활동하기 보다는 정부의 이익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독자성이 부족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 여성운동은 비로소 양성평등을 위한 주체성을 회복했으며 1990년대 이후 여성부 설립, 비례대표제를 통한 여성의원 증가 등 여성의 정치적 세력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홍세영, 2010). 스웨덴 사례를 비취봤을 때, 지금까지 한국 여성의 낮은 권력자원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정책을 형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된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한국 여성운동도 제도권으로 편입되어 정치, 정책,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한국 여성운동도 스웨덴 여성운동처럼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 여성운동은 다른 서구 유럽처럼 급진적인 성격보다는 온건한 성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성격의 복지국가를 형성한 것은 여성운동의 실용주의 성격이었다. 국가 페미니즘을 선택한 점과 보육 정책을 통해 양성평등을 구현하려 했던 것도 바로 실용주의 성격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등소평이 언급한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이 있다. 쥐를 잡는다면 흰쥐든 검은 쥐든 상관없다는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한국의 여성운동도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정책은 여성운동을 하나로 단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보육은 모든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슈였다. 스웨덴 여성운동은 아동 보육정책을 수단으로 정당 간, 노조 간, 조직 간 그리고 다양한 집단 간 연결망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여성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양성평등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보육은 커다란 이슈이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저출산·고령화, 이혼율 증가, 가족해체, 여성 및 아동 빈곤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보육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여성운동을 하나로 묶어주고 여성의 권력자원을 견고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이건정. 1992. "사회민주주의하의 스웨덴 여성". 여성과 사회.
- 이현근. 2007. 『여성, 평등 그리고 정치발전:스웨덴 실험과 한국』. 서울: 신지사서원.
- 홍세영, 2010. 『세계여성복지정책의 비교연구』, 박문사.
- Annesley, Claire(2007), "Women's Political Agency and Welfare Reform: Engendering the Adult Worker Model", Parliamentary Affairs Vol.60 No.3.
- Gray, David, Jerrey A. Mills, and Souruche Zandvakili. 2003. "An analysis of differential provincial income inequality trends in Canada."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incinnati.
- Hobson&Lindholm(1997), "Collective Identities, Women's Power Resources and Making of WelfareState", Theory and Society 26.
- MacPhail, Fiona. 2000. "What caused earnings inequality to increase in Canada during the 1980'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24:153-175.
- Korpi, Walter. 1998. "Power resources approach vs action and conflict: On causal and intentional explanations in the study of power." In Power Resources Theory and the Welfare State: A Critical Approach, edited by Julia S. O'Connor and Gregg M. Olse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Korpi, Walter.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O'Connor, Julia S. 1998. "Welfare expenditure and policy orientation in Canada, 1960-1990,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Power Resources Theory and the Welfare State: A Critical Approach, edited by Julia S. O'Connor and Gregg M. Olse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Stephens, John D. 1979.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Urbana, Il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Korpi(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Korpi(2000), "Face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 *Social politics*.
- Lewis, Jane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 159-73.
- Lewis, Jane.(1992) "Gender and welfare in Modern in Europe", *Past and Present Society*.
- Orloff, Ann Shol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Welfare State", i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3, Vol.53, June pp.303-328 (한국여성정책연구회 역,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서울: 새물결, 53-87쪽).
- Pavlova, Anastasia (2004), "Shaping Equal Gender Policy in Sweden in 1960-70-s", *Institute of General Histor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Pfau-Effinger(2004), "Social historical path of the male breadwinner model-an explanation of cross national differenc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ical* 2004 volume 55 issue 3.
- Pateman(1998), "The Patriarchal Welfare State", *The Welfare State Reader* by Christopher Pierson (Editor), Francis G. Castles (Editor).
- Sainsbury(1996) 「Gender, 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Sainsbury(Diane)1999. "Gender and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
D. Sainsbury,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 Oxford: OUP.
- Saraceno(1987), 'Division of Family Labour and Gender Identity'in
Anne Showstack Sassoon (ed) *Women and the State: The Shifting Boundaries of Public and Private*. (London: Hutchinson).
- Siaroff, A(1994) "Work, Welfare and Gender Equality: A New

Typology” D. Sainsbury, ed. Gendering Welfare Regimes.
London: Sage.

Sundström and Duvander(2002), "Gender division of child care and the
sharing of parental leave among new parents in Swede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www.ilo.org (국제노동기구)

www.ipu.org(국제의회연맹)

www.undp.org(유엔개발부)

〈Abstract〉

The Study about the power resource of
women and the welfare state
-The Focus on Swedish case

Hong Sae Young
(Professor,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 Hanzhong University)

Today, in Korea,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is very low comparing with another countries. Although the Korean women have been improving in education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male dominance and accompanying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persisted. This is caused by the low level of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in Korea. Why is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important related to the gender equality? So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answer by analyzing the Swedish case in the Power Resources theory.

In the result, the power resources of women impacts the policy of gender equality. The key element of the power resources is the political empowerment in women. The sweden women movement has been strengthen their political empowerment though the state feminism which is feminism created or approved by the government of a state or nation. It usually specifies a particular program. In Sweden, the women movement is join with the social democratic party especially. the women political organization have permeated to the party, Union, and

the Parliamentary. So they have influenced to make the gender equality policy. Since 1945, they tried to influence the child care and the parental leaves. They are very important policy impacting the gender equality.

key word: the Power Resources,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the state feminism, the child care, the parental leaves

성명: 홍세영 (Hang Sae Young)

소속: 한중대학교

주소: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211 한중대학교 교수회관 502호.

E-mail: sayyoung@hanzhong.ac.kr

논문접수일 2012년 7월 27일

논문심사일 2012년 8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25일